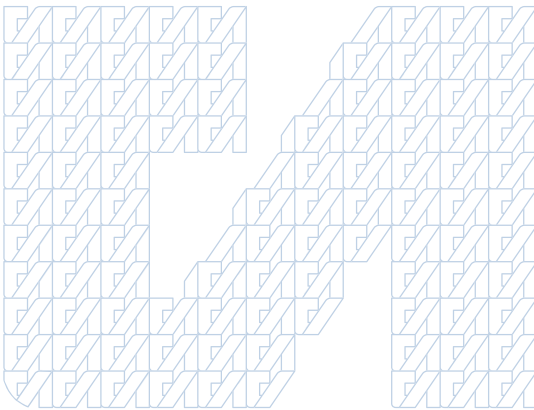


# 세종-대전간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지남석







정책연구 2020-01

# 세종-대전간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지 남 석

연구책임	• 지남석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정선아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석사
연구지원	• 임서연 / 세종연구실 조사원

정책연구 2020-01

## 세종-대전간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http://www.dsi.re.kr>

인쇄: 삼성디자인기획 TEL 042-221-3111 FAX 042-221-51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서론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종시는 국토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중이나, 도시 성장과정에서 대전, 충남·북 등 인접 충청권 시도와의 갈등 요인이 잠재하고 있음
- 이에 세종시는 충청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 세종과 대전은 2015년 상생협력 협약 이후 양 도시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생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두 도시 간의 상생협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 이후의 급격한 변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력방안을 검토·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인 '세종-대전'간 상생협력 협약에 대비하여 현재의 여건에 부합하는 세종시 입장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자 함

### □ 주요 연구내용

- 세종시와 대전시간 인구 이동 등의 연관성 검토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상생사업 검토 및 평가
- 상생협력 사례 조사: 해외 및 타 시도 (상생)협력 사례 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세종시와 대전시의 상생협력 구상: 전략 및 협력방안
- 추진전략·분야별 전략과제(사업) 도출

## ■ 지역의 상생협력

### □ 지역 상생이란?

- 상생(相生)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함께 공존하여 살아감” 등으로 정의함
- 지역간 상생발전이란, “지역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함
  - \* 국가균형발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 지역 상생·협력의 필요성

- 국가 발전전략의 변화와 국가 경쟁력 확대: 지역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해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
  -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대에 협력과 상생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 지역 상생 분위기 조성: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지자체간 상생협력’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는 추세임
  - 특히 지방 및 중소도시는 특화된 경쟁력 기반으로 하여 자립적 경제기반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간 경쟁·갈등 구조 완화: 과도한 지역간 경쟁·갈등 구조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주민 복지·삶의 질 향상: 인접도시간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과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
- 광역적 공동대응 필요성 증대: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됨

## ■ 기존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 검토

### □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2015년)

- 세종과 대전은 지난 2015년 단일 생활권의 지역공동체로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발전에 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음
- 기존 협약에서 제시되었던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사업은 상호 인접지역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 총 5개 분야, 15개 사업임

### □ 세종-타 지자체 상생협력 협약

- 세종-공주: 2018년 8월에 공주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2018.08.28.)
  - 주요 협력과제: '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읍면동 자매결연',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등 (협약 당시 4개 분야, 20개 상생협력 과제 추진)
- 세종-청주: 2019년 10월에 청주시와 양 도시간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 협약을 진행함(2019.10.18.)
  - 주요 협력사업: '오송 상봉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 및 교류 추진' 등 (4개 분야, 10개 과제)

### □ 충청권 차원의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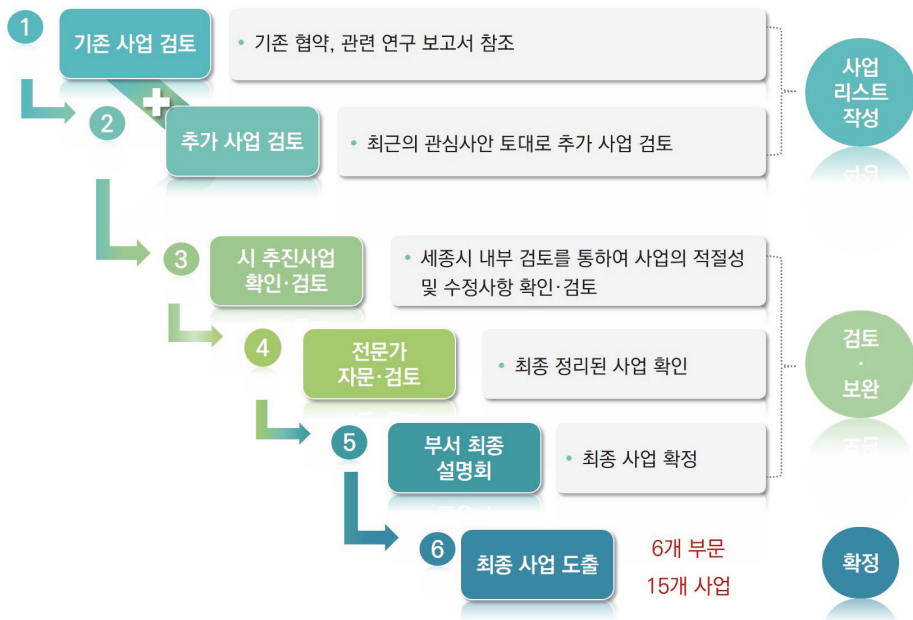
- 충청권 행정협의회: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생발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광역협의체임
- 충청권 실무협의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획조정(관리)실장이 참여하여 각 시·도 공동현안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상생발전사업 공동 발굴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됨
- 충청권 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광역지자체가 분기별로 모여 공동주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함 (2019.4. ~ 2019.11. 총 4차례 진행)

## ■ 상생협력 과제 도출

### □ 과제 선정의 원칙·기준(6가지)

- 기존 사업 참조: 기존 상생협약, 관련 연구자료, 세종시 검토자료 등에서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파급 효과: 사업의 혜택이 두 도시에 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사업
- 실현성: 사업 추진이 용이하여 실현성이 높은 사업
- 시급성: 시민 관심이 높거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
- 대표성: 해당 영역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사안으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시민 중심: 시민 만족을 우선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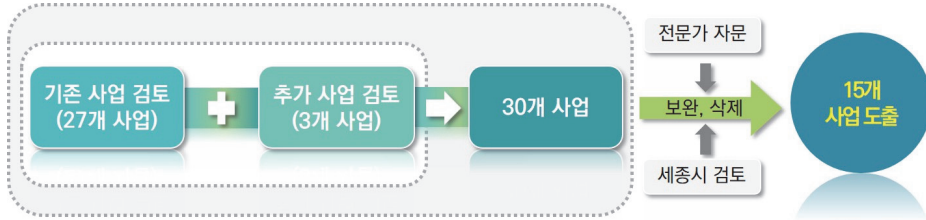
### □ 단계별 과정



[ 과제 도출 과정 ]

## ■ 최종 과제 도출

- 단계별 검토과정을 거쳐 세종시 입장에서 ‘세종-대전 상생협력사업’으로 도출한 최종 과제는 6개 영역, 총 15개 사업임



### [ 최종 상생협력사업 도출 결과(15개 사업) ]

분야	구분	과 제 명	담당부서
교육 (A-1개)	A-1	평생학습 교·강사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도시·시설 ·교통 (B-4개)	B-1	세종~대전 철도교통망 구축	교통과
	B-2	세종~대전 연결 대안도로 개발	도로과
	B-3	세종~대전 간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건설	교통과
	B-4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과
문화·관광 (C-6개)	C-1	세종·대전 문화의 통합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과
	C-2	자전거 둘레길 유지관리	치수방재과
	C-3	대전-세종 관광 실크로드	관광문화재과
	C-4	세종-대전 생활문화 관련 행사 공동 개최	문화예술과
	C-5	공공적 문화 향유시설의 개방	문화예술과
	C-6	거장의 동행: 이응노-장욱진	문화예술과
산업·경제 (D-1개)	D-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 강화	경제정책과
행정·복지 (E-1개)	E-1	중증장애인 리프트 전용버스 사업	노인장애인과
환경 (F-2개)	F-1	자원재활용 시민문화 확산	자원순환과
	F-2	민간중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환경정책과

## ■ 정책 제언

### □ 시민 만족 제고에 주력

- 세종-대전은 통근, 통학 등의 이동이 많다는 점에서 단일 생활권이라 볼 수 있음
  - 협력사업은 시민의 도시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

### □ 상생협력사업 지속 발굴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약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의 여건 변화, 도시 특성 등을 반영하는, 도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함

### □ 신중한 사업 선정

-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지자체 간에 민감한 사안은 적절하지 않음
- 사업 선정에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통 관심사안 + 사업추진의 혜택 및 효과의 배분 + 적극적 추진 가능성(실현성)”을 중심으로 검토함이 적절할 수 있음

### □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최근 인접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임
- 앞으로 세종-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협력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①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예: 간사이 광역연합) 또는 ② 개별 사업 단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추진체(협의체 등) 구성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3. 기대 효과	6
제2장 이론 검토	7
제1절 지역의 상생협력	9
1. 지역 상생이란?	9
2. 지역 상생·협력의 필요성	11
제2절 지역 상생의 형태와 유형	16
1. 도시간 상생협력 모델	16
2. 관련법에 의한 지역상생의 유형	18
제3절 세종-대전의 관계	19
1. 인구 이동·변화	19
2. 관련 계획·연계 사업	22
제4절 기존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 검토	24
1.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2015년)	24
2. 세종-타 지자체 상생협력 협약	26
3. 충청권 차원의 논의	27
4. 시사점	29
제3장 사례 검토	31
제1절 국내 사례	33
1. 광역지자체	33

2. 기초지자체 .....	38
3. 국내 사례 시사점 .....	40
제2절 해외 사례 .....	41
1.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 .....	41
2. 영국: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 .....	44
3.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도시계획 .....	46
4. 프랑스: 리옹 메트로폴 .....	48
5.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	50
6.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도시권 .....	52
7.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	54
8. 해외 사례 시사점 .....	56
제4장 상생협력 과제 도출 .....	57
제1절 과제 도출 과정 .....	59
1. 과제 선정의 원칙·기준 .....	59
2. 상생 이슈 찾기 .....	60
3. 단계별 과정 .....	61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	63
1. 기존 사업 검토 .....	63
2. 추가 사업 검토 .....	64
3. 세종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66
제3절 최종 과제 도출 .....	67
1. 사업 도출 결과 .....	67
2. 사업별 주요 내용 .....	68
제5장 결론 .....	77
제1절 검토내용 종합 .....	79
제2절 정책 제언 .....	82
참고문헌 .....	85

## 표 차례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지역간 상생발전 개념 정의 .....	10
[표 2-2] 메가시티 7가지 유형 .....	16
[표 2-3] 네트워크 도시의 유형 .....	17
[표 2-4]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 상생협력 유형 .....	18
[표 2-5]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 인구 변화 .....	19
[표 2-6] 세종시 전출지·전입지별 이동자수 .....	20
[표 2-7] 2015년 세종-대전 상생협력사업 목록 .....	25
[표 3-1]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책사업 .....	38
[표 3-2] 해오름동맹 주요 추진사업 (2019년 5월 기준) .....	39
[표 3-3]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리전 내 대학 및 연구기관 .....	43
[표 3-4] 란트스타트 주요 도시의 기능 .....	51
[표 4-1] 최종 상생협력사업 도출 결과(15개 사업) .....	67

# 그림 차례

[그림 1-1] 사업 검토 및 도출 과정 .....	5
[그림 1-2] 연구의 내용 구성 .....	6
[그림 2-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	12
[그림 2-2]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서 .....	14
[그림 2-3] 충청권 인구 변화(2012-2019년) .....	19
[그림 2-4] 시·도별 순이동률(2019년 8월) .....	20
[그림 2-5]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협약식 .....	22
[그림 2-6] 기존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서(2015년) .....	24
[그림 2-7] 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협약서 .....	26
[그림 2-8] 충청권 행정협의회 .....	27
[그림 2-9] 충청권 실무협의회 .....	28
[그림 3-1] 광역도시계획 지역 현황 .....	33
[그림 3-2] 광역도시계획 상생발전 추진목적 .....	34
[그림 3-3] 부산·울산·경남 상생협약식 .....	35
[그림 3-4] 팔공산 둘레길 전국 걷기대회 .....	36
[그림 3-5]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 .....	41
[그림 3-6] 영국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 .....	44
[그림 3-7]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도시계획 .....	46
[그림 3-8] 프랑스 리옹 메트로폴 .....	48
[그림 3-9]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	50
[그림 3-10]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도시권 .....	52
[그림 3-11]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	54
[그림 4-1] 세종시 상생협력 과제 도출 방향 .....	59
[그림 4-2] 타 지역(도시)과의 상생 관심사안 .....	60
[그림 4-3] 과제 도출을 위한 Issue Finding .....	60
[그림 4-4] 과제 도출 과정 .....	61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장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배경 및 필요성

- 세종시는 국토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음(2012년 7월 출범)
  -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전, 충남·북 등 인접 충청권 시도의 인구, 산업 유출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세종시는 충청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sup>1)</sup>
  - 이는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광역적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
- 본 연구의 대상인 ‘세종-대전’의 경우, 행정수도로서의 국가중추행정기능(세종)과 과학기술 선도도시(대전)로서의 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음
  - 향후 도시 위상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발전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임



1) 세종시는 2015년 4월 7일, 대전시와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음

- 세종과 대전은 2015년 상생협력 협약 이후 양 도시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생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두 도시 간의 상생협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 이후의 급격한 변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력방안을 검토·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인 '세종-대전'간 상생협력 협약에 대비하여 현재의 여건에 부합하는 세종시 입장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상생협력 협약 사업과 최근까지 진행된 관련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인 연계 발전을 위한 세종-대전 상생발전 사업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 세종시와 대전시간 인구 이동 등의 연관성 검토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상생사업 검토 및 평가
- 상생협력 사례 조사: 해외 및 타 시도 (상생)협력 사례 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세종시와 대전시의 상생협력 구상: 전략 및 협력방안
- 추진전략·분야별 전략과제(사업) 도출



## 2. 연구 방법

- 연구 진행에 있어 진행될 주요 내용은 크게 ‘문헌조사’, ‘기존 자료(사업) 검토’,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으로 구분됨
- 문헌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7년),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2014년) 등의 문헌자료 검토
- 기존 자료 검토: 인구, 자원 등 현황자료 및 기존에 논의된 상생사업 검토(2015년 협약 사업, 관련계획·연구 등에서 제시된 사업 등)
- 사례분석: 국내·외 인접 도시간 상생협력 성공사례 조사
- 전문가 의견 청취: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



- 한편, 사업 검토 및 도출 과정은 [그림 1-1]에 정리한 내용과 같음
  - 2015년 협약에서 제시되었던 ‘기존 사업 검토’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한 ‘추가 사업 검토’, ‘세종시 관련부서 확인·검토’, ‘전문가 자문·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을 도출함



[그림 1-1] 사업 검토 및 도출 과정

### 3. 기대 효과

- 기존 2015년에 체결한 협약을 보완하여 최근의 두 도시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세종시와 대전시의 상생과 협력을 증진하고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림 1-2] 연구의 내용 구성

## 이론 검토

제1절 지역의 상생협력

제2절 지역 상생의 형태와 유형

제3절 세종-대전의 관계

제4절 기존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 검토

## 2장



# 제2장 이론 검토

## 제1절 지역의 상생협력

### 1. 지역 상생이란?

#### 1) 상생의 개념

- 상생(相生)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함께 공존하여 살아감” 등으로 정의함
  - 즉,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경제적인 의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

#### 2) 지역간 상생발전의 개념

- ‘지역간 상생발전’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몇몇 법규 및 국가계획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수도권 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항 제3호),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제18조 제2항 제3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제22조 제2항 제10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p.28), 광역경제권간 공유자원, 산업, 인프라 등을 연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 도모(p.41) 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지역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p.27), 수도권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방대도시권의 증추거점 및 연계기능 강화 (p.47),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p.186),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p.193), 타 권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p.195), 도시간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광역적 상생발전 도모(p.199)

-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지역간 협력”, “공동발전”, “상생협력” 등 지역간 상생발전에 대해 다양한 개념 정의를 시도해 왔음
- 공통적으로 지역간 상생발전이란, “지역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이익의 창출을 도모하고 발전하는 상태”로 정리할 수 있음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지역간 상생발전 개념 정의**

구분	개념
한표환 외 (2002)	• 어느 일방의 편파적이고 독점적인 이익관계가 아닌 협력당사자 간의 대등한 상호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출발
박양호 외 (2003)	• 복수의 지역 간에 상호이익을 발생하면서 진화하는 과정
이원섭 외 (2005)	• 하나 이상의 지역들이 협력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 복수의 지역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교류협력사업, 관련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등 거시적 차원에서 국토 전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며 발전하는 과정
충남·경기 상생발전방안 (2007)	• 참여하는 지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간 일체의 연계·보완 및 협력활동을 지칭
정화윤 외 (2011)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해당 지역에 호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며, 일회적이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발생하는 것
오윤경 (2012)	• 복수의 지역 간에 상호이익을 발생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으로 협력적 공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김현호 (2013)	• 지역이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 권한,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
이동우 외 (2013)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립적 지역들이 상호 배려 및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 발전하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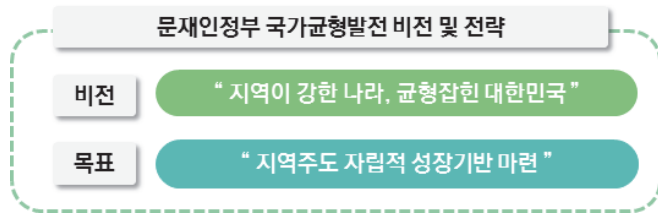
자료: 이동우 외(2013), '지역통합·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지역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지역간 상생발전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특화발전된 자원을 교류하고 낙후 지역을 보완하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자원을 연계·교류하는 발전 방식임
-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1)

## 2. 지역 상생·협력의 필요성

### 1) 국가 발전전략의 변화와 국가 경쟁력 확대

-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할수록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게 됨
  - 지역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해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대에 협력과 상생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잠재력 및 경쟁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정책의 중요한 과제임
-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축을 발굴하고 국토 전체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간에 경쟁이 아닌 상생발전과 공유경제 등 협력·융합을 통해 상생토록 하는 건전한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

[그림 2-1]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 2) 지역 상생 분위기 조성

-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지자체간 상생협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서 시작된 지역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은 오히려 지역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특히 지방 및 중소도시는 특화된 경쟁력 기반으로 하여 자립적 경제기반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 특화된 도시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간 상호 보완기능을 활용하여 도시간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 도시군’ 형성이 중요함(예: 홍콩(Front Shop)과 심천(Back Factory))

## 3) 지역간 경쟁·갈등 구조 완화

- 도시 또는 지역 상생발전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과도한 지역간 경쟁·갈등 구조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갈등 문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



#### 4) 주민 복지·삶의 질 향상

- 인접도시간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예: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부지 내에 2023년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지자체가 공동대응하여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로 평가됨

〈 ‘나만 살자’ 지자체들 ‘같이 살자’ 택하니 뭉치던 황재 〉

스카이데일리 2019.03.04.

##### “충북 중부 4개 지자체 소방병원 유치 패거... 협업만이 살길”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방복합치유센터 최종입지로 충북 음성군을 확정·발표했다. 62개 지자체가 응모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경쟁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충북 음성이 수도권의 쟁쟁한 후보지를 제치는데 성공한 배경에는 후보지 단일화 등 인근 지역들의 역량 결집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음성·진천·괴산·증평군의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 결의는 지방정부의 협력·협치·공감 행정의 새로운 본보기다”며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최고의 의료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단계부터 충북도와 음성, 진천, 유관기관 등과 TF팀을 가동하고 의료 인프라·의료인 복지시설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우 음성군청 주무관은 “음성군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다고 해서 음성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병원이 들어서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기타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는 혁신도시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중부 4군 모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성공한 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에 거주하는 이철현(남·45) 씨는 “그동안 종합병원이 없어 청주나 서울로 가야 했지만 소방병원이 들어오면 의료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음성뿐 아니라 주변 진천·괴산·증평 등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공조 약속: 2019년 3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법 조속 개정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을 위해 공동 대응기로 약속하였음

##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 광역화,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 등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기회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충청권 각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동시에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 ①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공동 대응
- ② 충청권 학생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확대

**제3조(협의 조정)**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기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26일

 <p>대전광역시 허 태 정</p>	 <p>세종특별자치시 이 춘 희</p>
 <p>충청북도 이 시 종</p>	 <p>충청남도 양 승 조</p>

자료: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그림 2-2]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서

##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출범 >

굿뉴스365 2019.09.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3일 출범했다. 공동대책위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하 생략)

공동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 지역으로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 비즈니스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했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5) 도시기능 확산에 따른 광역적 공동대응 필요성 증대

- 도시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실제 행정단위와 기능적 공간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활권 중심 공간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을 고려한 광역 및 주민 생활권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함
- 지리적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 문제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리 주체 설정, 비용 부담 등의 민감한 사안에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됨

## 제2절 지역 상생의 형태와 유형

### 1. 도시간 상생협력 모델

#### 1)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

- 메가시티 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철도·교통·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인구 밀집도시 지역’을 말함
  - 메트로폴리스, 대도시권<sup>2)</sup>, 메갈로폴리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Florida et. al(2008)은 메가시티 지역을 ‘중심지로서의 도시와 배후지권을 포함하는 면(面)의 개념으로 기존 대도시 개념과 유사하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연계체제를 가진 지역’으로 정의함
- 메가시티 지역 관련연구는 Gottmann(1961)이 미국 북동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메가폴리스(Megapolis) 연구에서 시작됨
  - 이후 Castell(1996)이 처음으로 메가시티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대규모 집적지로서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연구에 활용하였음
- 최근 Brookings 연구소(2016)에서는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메가시티를 7가지로 유형화하기도 함

[표 2-2] 메가시티 7가지 유형

유형	해당 도시
글로벌 자이언트	• 뉴욕, 도쿄, 런던 등
아시안 핵심도시	• 홍콩, 서울, 싱가포르
신흥 관문도시	• 뭄바이, 케이프타운, 멕시코시티, 항저우
중국 핵도시	• 선양, 장춘, 청두
지식 도시	• 샌프란시스코, 보스톤, 취리히
미국 중량급 도시	• 올란도, 사크라멘토, 휴닉스
국제 중량급 도시	• 밴쿠버, 멜번, 브뤼셀, 텔아비브

자료: 황혜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 2) 경제, 사회, 문화 등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영향력이 도심지를 넘어 외곽 또는 교외 지역의 다른 자치정부의 관할 경계구역까지 미치는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대도시 지역을 의미함 (안영훈, 2008)

## 2) 네트워크 도시 (Network City)

- 네트워크 도시는 '2개 이상의 독립된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협력하고 교통 및 통신시설에 의해 집적경제를 달성한 도시 또는 도시 지역'으로 정의됨(Batten, 1995)
  - 경제적 관점에서는 '2개 이상의 도시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상호 협력적 활동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도시로 정의'되기도 함(Capello, 2000)
- 네트워크 도시 이론은 지역 내 상대적 자립성을 가진 중소도시들 간의 상호보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메가시티 지역 이론과 차이가 있음
  - 중심지 도시체계의 기능 보완, 교통 및 통신 인프라로 경제주체들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 도시간 전문화·분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서로 다른 기능과 자원에 특화된 주체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효과를 나타냄
- 네트워크 도시는 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표 2-4]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표 2-3] 네트워크 도시의 유형

분류기준	연구자	유형
도시간 관계	Batten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핵도시: 하나의 수위도시가 중심이 됨</li> <li>• 연담도시: 두 도시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li> <li>• 네트워크도시: 셋 이상의 도시들 간 네트워크 형성</li> </ul>
도시권 성장유형	Champion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형 / 결합형 / 융합형</li> </ul>
부문별 레이어	Schaick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공간 / 교통정보의 흐름 / 도시디자인</li> </ul>
시너지효과 발생 메카니즘	Meijers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럽네트워크: 동일 기능으로 특화된 도시간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li> <li>• 웹네트워크: 이질적 기능으로 특화된 도시간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범위의 경제 추구</li> </ul>
도시내부 연계	Van Oort et.a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내 연계 / 도시권내 연계 / 도시권간 연계</li> </ul>

자료: 최길수 외(2017),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및 황혜란 외 (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 2. 관련법에 의한 지역상생의 유형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로는 크게 사무공동처리(제147조), 사무위탁(제151조), 행정협의회(제152~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159~161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등이 있음
- 이 중에서 지방정치 및 행정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임

[표 2-4]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 상생협력 유형

구 분	운영목적	특 징
사무 공동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또는 지원 요청을 받으면 법령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간 소관 사무를 공동으로 협약·협의를 통해 처리</li> <li>•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일종의 계약이라 법적 근거 불필요</li> </ul>
사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나 장은 소관 사무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장에게 위탁 처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간 책임 전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무위탁에 따른 권한 축소 및 재정적 부담 우려</li> </ul>
행정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 규약으로 운영되며 협력 초기단계에 적합</li> <li>•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체가 아니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집행상 기능이 제한적임</li> <li>• 자치단체간 갈등문제 해결 및 공동연구·건의 등의 취지로 활용</li> </ul>
지방자치 단체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법인이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상급기관의 승인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 자율성이 제약적임</li> <li>•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편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성격이 강함</li> </ul>
지방자치 단체장 등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전국단위로 운영</li> </ul>

자료: 권용석 외, 「대구경북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5

# 제3절 세종-대전의 관계

## 1. 인구 이동 · 변화

### □ 충청권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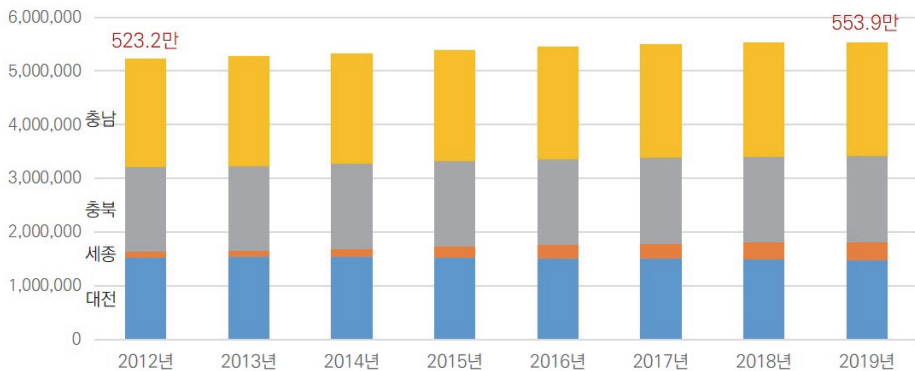
○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의 충청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충청권 총인구: 2012년 523.2만 → 2019년 553.9만 규모로 증가

[표 2-5]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 인구 변화

구분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전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1,502,227	1,489,936	1,474,870
세종	113,117	122,153	156,125	210,884	243,048	280,100	314,126	340,575
충북	1,565,628	1,572,732	1,578,933	1,583,952	1,591,625	1,594,432	1,599,252	1,600,007
충남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2,126,282	2,123,709
충청권 합계	5,232,105	5,275,327	5,329,140	5,391,260	5,445,770	5,493,529	5,529,596	5,539,16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매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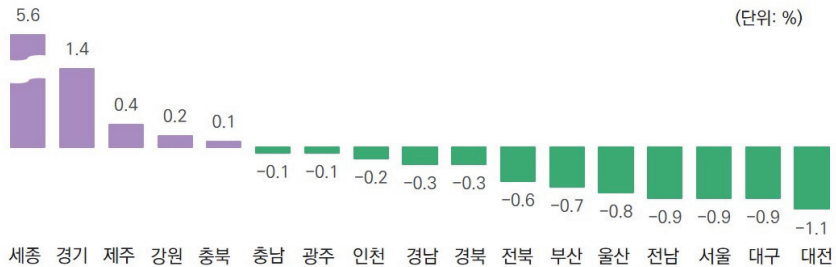


[그림 2-3] 충청권 인구 변화(2012-2019년)

□ 인구 이동 및 변화 추이

-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을 토대로 '인구 순이동률'을 살펴본 결과, 세종지역의 순이동률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대전은 -1.1%로 낮은 편임

\* '인구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는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됨'을 의미함



자료: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8749](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8749)

[그림 2-4] 시·도별 순이동률(2019년 8월)

- 한편, 세종과 대전은 인접도시로서, 인구 이동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 2018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 세종시 전입(세종시 내부 이동 포함)자의 25.7%(22,180명), 세종시에서 타시도로의 전출자의 11.6%(6,36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6] 세종시 전출지·전입지별 이동자수

(단위:명, %)

시도별	전입인구(타시도→세종)		전출인구(세종→타시도)	
	합계(명)	백분율(%)	합계(명)	백분율(%)
서울	5,861	6.8	3,724	6.8
부산	943	1.1	530	1.0
대구	887	1.0	377	0.7
인천	1,125	1.3	771	1.4
광주	891	1.0	314	0.6
대전	22,180	25.7	6,365	11.6
울산	361	0.4	131	0.2
세종	28,450	32.9	28,450	51.7

자료: 2018 세종 주민등록인구통계



〈 대전 떠나 세종으로.. 세종 인구유입 지속, 규모는 주춤 〉

대전일보 2019.09.25.

대전 이탈 인구가 세종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인구 빨대’ 현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을 떠난 사람 10명 중 7명 가량이 세종으로 향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전의 순이동자는 1,315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총전입 1만 6,575명, 총전출 1만 7,890명으로 1,315명이 순유출된 셈이다. 대전의 순이동률은 -1.1%로 서울·대구(-0.9%) 보다도 높다.

하지만 세종으로 흘러들어간 순이동 인구가 1년 전에 견줘 크게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세종의 순이동 인구는 2,708명으로 1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42%(1,140명)가 줄었다. 전달인 7월(2,463명)과 비교해도 무려 36%(895명) 빠졌다. 올해만 보면 세종으로의 순이동자는 1월 2,457명, 2월 3,293명, 3월 2,076명, 4월 1,486명, 5월 1,085명, 6월 1,661명 등으로 들쭉날쭉한 증감을 기록했다. 점에서 세종을 향한 인구행렬의 감소 흐름이 완연하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 2. 관련 계획·연계 사업

### □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착수

- 대전·세종·충남·충북은 2019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 협약에 근거하여 충청권 4개 시도는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지역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하였음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 발전체계를 정립하고 중부권이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임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배경	• 세종시가 건설되고 더불어 대전·충남·충북이 새롭게 나아가는 것의 시작으로 이들 4개의 충청권 시도가 힘을 모아 행복도시 광역권상생 발전에 첫걸음을 내딛음
목표	•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발전체계 정립 및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모델 계획을 통한 상생발전
내용	• 충청권이 뜻을 모아 실행력 담보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새로운 광역적 성장본보기(모델) 제시

자료: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자료: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203>)

[그림 2-5]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협약식

□ 대전·세종 상생협력 대세밸리 조성 추진

-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북)에는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이 취약하고 첨단산업도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충청권 내 인접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 바이오밸리, 오송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등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대전·세종 상생협력 대세밸리는 충청권 핵심도시들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자산 이동을 촉진하고 중부권 광역경제 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작업임
- 세종-대전의 접경지에 충청권 상생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중부권 광역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 대전의 연구단지와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시설을 세종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산업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와 함께 주변에 산업단지 또는 첨단과학지식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대전·세종 상생협력 대세밸리 조성	
공약내용	• 대전(R&D 및 벤처)~세종(과학기술정책)의 지역적 강점을 살린 충청권 첨단과학지식산업 집적밸리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2024년
	• 사업위치: 대전(유성구, 안산산단, 대동·금탄, 신동·둔곡)~세종(금남면 일원)
세부 추진계획	• 사업비: 0.5억 원대(대세밸리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향후 발굴될 사업계획·규모에 따라 사업비 추계 예정
	• 내용: 4차 산업혁명 거점 충청권 상생협력 산업단지 조성 - 대전과 세종의 산업 및 과학 인프라를 연계하여 충청권 상생협력 산업 기반 마련 - 대덕특구·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간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세부 추진계획	•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등을 통한 공동과제 발굴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과제(사업) 발굴(2019년) •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중부권 광역경제구상 구체화 및 실행방안 마련(2019년~)

자료: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 제4절 기존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 검토

## 1.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2015년)

### 1) 개요

- 세종과 대전은 지난 2015년 단일 생활권의 지역공동체로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발전에 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에서는 두 도시간 상생협력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세종은 자족도시로 성장 전까지 부족한 도시인프라를 인접도시인 대전에서 보완 필요
  - 대전은 세종시 성공건설과 이주자의 조기정착이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후도시 역할 강화 필요
  - 세종·대전은 상생협력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야기되는 주민불편 해소와 광역도시권(제2수도권)으로 동반발전 계기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식 개요	
일시	•2015.04.07.(화) 11:00. 대전시청 중회의실
참석	•양 도시 시장, 관련 실·국장
내용	•대전-세종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동번영을 위한 -  
**상생협력 협약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 및 발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행정구역을 넘어 두 도시의 인프라 및 자원을 공유(공동활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협력분야) 두 도시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두 도시의 동반발전을 위해 상호 인접지역에 상생산업단지를 공동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국제파워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2. 두 도시간 편리한 교통과 교류 확대를 위해 BRT 노선 확대,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 광역교통시스템을 확충한다.
3.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

4. 두 도시 시민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행사 및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5. 두 도시의 지역 경쟁력 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공동된 상호교류를 추진한다.


제3조(사무협의의) 본 협약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협의조절) 기 발간된 [별첨] 상생협력사업(총액 120억)을 추진 추진하고, 기타 협력분야 및 협력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대전광역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201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장  
권 선 덕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그림 2-6] 기존 세종-대전 상생협력 협약서(2015년)

## 2) 2015년의 기존 상생협력사업

- 2015년 4월 7일에 체결된 협약에서 제시되었던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 사업은 상호 인접지역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 총 5개 분야, 15개 사업임

[표 2-7] 2015년 세종-대전 상생협력사업 목록

분야	과제	세부사업	추진사항
산업 · 경제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상호 인접지역 상생산업단지 조성	불가
		• 국내외 투자 및 기업 공동유치	완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협력	추진중
	기업지원 서비스 공유	•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등 기업지원기관 공동활용	완료
교통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	• BRT 노선 확대 운영 및 무료환승 등 광역 환승체계 구축	완료
		• BIS(버스정보시스템) 공동 운영	완료
도시 · 시설	도시계획 공동수립	•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중
	도시인프라 공유	• 2단계 상수도물 공급	완료
		• 평생교육시설(시민대학·도서관 등) 공동활용	완료
문화 · 관광	시립예술단 교류	• 시립예술단 교류·초청음악회 개최	완료
	연계관광 사업 추진	•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	완료
행정	공동 연구	• 연구원 통합 설치 운영 등 공동 연구 활성화	완료
	공무원 교육	• 대전인재개발원 활용 세종시 공무원 교육	완료
	공무원 교류	• 공무원 동호회 친선대회 및 상호 인사교류(파견) 실시	완료
	재난재해 지원	• 상호 재난재해 긴급지원체계 구축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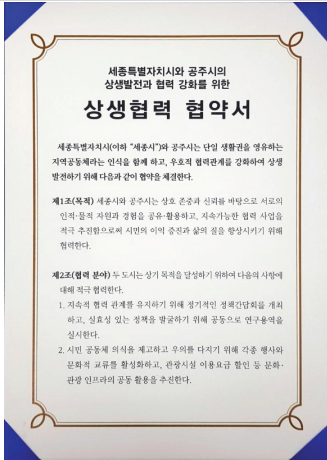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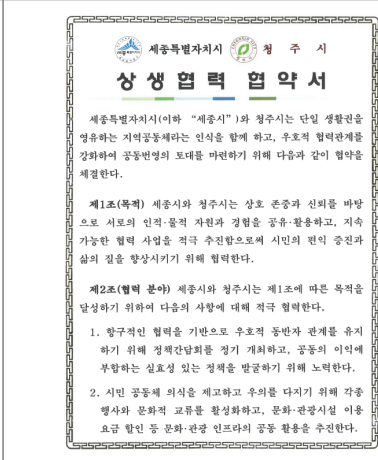
## 2. 세종-타 지자체 상생협력 협약

### 1) 세종-공주(2018년)

-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에 공주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음(2018.08.28.)
  -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공동 연구용역, 정책발굴 등 진행
- 이에 근거하여 양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추진토록 함
  - 주요 협력과제: ‘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읍면동 자매결연’,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등 (협약 당시 4개 분야, 20개 상생협력 과제 추진)
- 협약 이후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조정하고, 신규과제도 추가로 논의함

### 2) 세종-청주(2019년)

- 세종시는 지난 2019년 10월에 청주시와 양 도시간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 협약을 진행함(2019.10.18.)
  - 주요 협력사업: ‘오송 상봉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 및 교류 추진’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b>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b></p> <p>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공주시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생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p> <p><b>제1조(목적)</b> 세종시와 공주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한다.</p> <p><b>제2조(협력 분야)</b> 두 도시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적 협력 관계형 유지를 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 하고, 상호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li> <li>2. 시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각종 행사와 문화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설 이용유급 할인 등 문화·관광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상생협력 협약서</b></p> <p>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청주시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p> <p><b>제1조(목적)</b> 세종시와 청주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한다.</p> <p><b>제2조(협력 분야)</b> 세종시와 청주시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구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정기 개최하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호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li> <li>2. 시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각종 행사와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시설 이용 유급 할인 등 문화·관광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li> </ol>
<p><b>세종-공주(2018년)</b></p>	<p><b>세종-청주(2019년)</b></p>

[그림 2-7] 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협약서

### 3. 충청권 차원의 논의

#### 1) 충청권 행정협의회

-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각 지자체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생발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광역협의체
  - 각 광역지자체가 협력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3개 시도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
  - 필요시 정부 또는 중앙부처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안사업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함

충청권 행정협의회	
성격	•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각 지자체 현안에 대해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생발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광역협의체
내용	• 시·도간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충청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 • 각 광역지자체가 협력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3개 시도가 지원방안을 논의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자료: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5645](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5645))

[그림 2-8] 충청권 행정협의회



## 2) 충청권 실무협의회

- 충청권 실무협의회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획조정(관리)실장이 참여하여 각 시·도 공동현안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상생발전사업 공동 발굴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됨
- 충청권 실무협의회에서는 4개 충청권 시·도지사를 회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청권행정협의회와 함께 각 시도의 공동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과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추진 중임

충청권 실무협의회	
구성 목적	•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현안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상생발전사업 공동 발굴과 상호 협력 도모
목표	•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 • 충청권 지자체의 결속 및 지역주도적 혁신
내용	• 지역의 공동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주요 업무계획 및 충청권 상생협력 연구용역 사업 선정, 시·도간 공동 협력사항에 대한 논의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그림 2-9] 충청권 실무협의회**



### 3) 충청권 당정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광역지자체가 모여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개최함
  - 목적: 충청권 공동의 핵심현안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
  - 개최: 분기별로 개최하여 공동주제 등 지역 현안에 논의하고 적극 대응키로 함 (2019.4. ~ 2019.11. 동안 총 4차례의 협의회 진행)
  - 공동주제: 2030 충청아시아게임 공동유치 건의, 충청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공동대응,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 4. 시사점

- 세종, 대전을 포함한 범 충청권에서는 상생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간에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세종과 대전의 경우, 지난 2015년 협약 이후 지속적인 협력 노력을 진행해 왔음
  - 세종시는 대전시와의 협약 성과에 기반하여 이후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음
  - 이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세종시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자체와의 적극적 교류 및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 시민이 체감하기 용이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충청권의 상생발전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임





# 사례 검토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해외 사례

## 3장



# 제3장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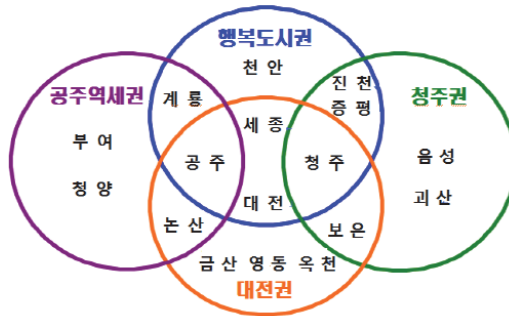
## 제1절 국내 사례

### 1. 광역지자체

#### 1) 행복도시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

□ 개요

- 2018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그림 3-1] 광역도시계획 지역 현황

□ 주요 활동

- 2018년 6월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9년 4월에 4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착수하였음 (2020년 12월 수립 완료 예정)
  - 주요 내용: 광역경제권 설정,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광역시설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등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및 광역상생발전기획단 구성·운영
-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중임
-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 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 적극 추진 예정

### (1) 배경

**충청권 성장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 제고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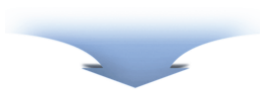
(인구, 산업 등 광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필요성 대두)

**충청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필요**

(충청권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기반시설 접근성 제고와 충청권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

**주요 정책 이슈 관련 충청권 자치단체 간 협력 유도**

(고속도로 노선 철도역및 노선,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현안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지역경쟁력 약화 우려)



### (2) 목적

균형발전 견인 및 중부권 동반성장을 위해 광역적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충청권의 광역상생발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충청권 광역상생 협력을 새로운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육성**

자료: 국토연구원 외(2019),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중간보고자료.

### [그림 3-2] 광역도시계획 상생발전 추진목적

## 2) 부산·울산·경남 광역상생협약

### □ 개요

- 2018년 6월 26일 당시 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이 동남권 현안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함
  - 부·울·경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원팀(One Team)을 구성을 추진함

### □ 주요 내용 및 활동

- 협약문에는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설치’, ‘동남권 광역교통청 신설’, ‘동남권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광역혁신경제권 구성’, ‘시민의 안전한 삶 추구’,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공동 TF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구분	내 용
협약배경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 실현 및 부산·울산·경남 통합행정에 대한 필요성
협약목표	• 부산·울산·경남의 통합행정 실현 • 새로운 화합과 번영을 위한 원팀(One Team) 구성 • 동남권 시민의 삶 개선 및 지역 갈등 치유
협약내용	• 동남권(부울경) 공동협력기구 설치 • 동남권 광역교통청 신설 • 동남권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 광역혁신경제권 구성 • 시민의 안전한 삶 추구 •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공동 TF 구성



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그림 3-3] 부산·울산·경남 상생협약식

### 3) 대구-경북 광역 상생협력사업

- 대구와 경북은 광역지자체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팔공산 둘레길의 경우, 지난 2015년 6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외 4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 대구-경북 상생사업: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

구분	내 용
사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흩어져 있는 탐방자원 연결 및 탐방수요 분산</li> <li>•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필요</li> </ul>
사업기간	•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동구,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를 순환하는 총연장 108km의 팔공산 둘레길 조성</li> <li>• 우수한 산림환경 보전 및 시·도민에 산림문화휴양 기회 제공</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 체결, 숲길 정비, 숲길 안내센터 설치, 안내체계 구축, 도보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li> <li>• 팔공산 둘레길 홍보 위해 ‘팔공산 둘레길 전국 걷기대회’ 개최</li> </ul>



자료: 케이투데이(www.ktoday.co.kr), 대구·경북뉴스(www.dailydgnews.com)

[그림 3-4] 팔공산 둘레길 전국 걷기대회



□ 대구-경북 상생사업: 광역철도사업

구분	내 용
사업배경	• 경부선 일반철도 새마을, 무궁화호를 출퇴근용 도시철도처럼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됨
사업기간	• 2019년 4월 공사 착공, 4년 내 준공 목표 추진중
사업목표	• 구미~칠곡~대구~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음 • 대구-경북 지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동반성장 효과 기대 •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현실화
사업내용	• 도시 간 연계성 강화 • 출·퇴근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 • 교류 확대 및 상생경제 구축

〈 ‘구미~대구~경산’ 대구광역철도 건설 본격화 〉

경북매일 2019.04.16.

구미에서 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철도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구광역권 철도는 설계와 착공을 두고 잡음이 일었었다. 대구시는 16일 “총연장 61.85km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공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천239억원이 투입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개통으로 여유가 생긴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한다. 올해 신설 역 2곳 건설에 들어가 4년 내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은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대구~경산(61.85km)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구와 구미, 경산의 균형 발전은 물론 출·퇴근 교통 편의 제공으로 대구광역경제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거장은 총 9개로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역 등 기존 5개 역과 사곡,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역 등 4개 역이 신설된다. 출·퇴근시간 15분 등 15~20분의 배차 간격을 두고 하루 61차례 운행될 것으로 보이며 구미에서 경산까지 43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KTX·SRT) 복합역사인 서대구 고속철도역 기공식이 열린다. 총사업비 703억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천여㎡ 규모로 철로 위에 건립하는 선상역사로 짓는다.

## 2. 기초지자체

### 1)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 □ 개요

- 2004년 9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중부내륙권의 경제회생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부지역 3개 도, 6개 시·군이 참여하여 발족함 (강원 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봉화)

#### □ 주요 활동

- 매년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앙부처에 정책을 건의함

**[표 3-1]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책사업**

년도	공동협력사업	중앙부처 공동건의사업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운영실무위원회 공동기금 조성</li> <li>•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연계 활성화</li> <li>• 지역축제 교차 홍보</li> <li>• 평창동계올림픽 동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li> <li>• 평창~제천(국지도82호) 조기 착공 등 (6개 사업)</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위기 공공대응시스템 구축</li> <li>• Triple-Six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백두대간 사과정원 조성</li> <li>• 임산지원 복합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등 (13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li> <li>•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li> <li>• 평창~제천(국지도82호) 조기착수 등 (6개 사업)</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경계지역에 혐오시설 설치 자제</li> <li>• 민간부문 인허가시 사전협의로 민원 발생 최소화</li> <li>•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 공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백선(제천~태백)고속열차 도입</li> <li>•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기 건설</li> <li>•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국립공 원구역 국유지 적극 편입</li> <li>• 평창~제천(국지도82호) 조기착수 등 (7개 사업)</li> </ul>

## 2) 해오름 동맹

### □ 개요

- 2016년 6월 30일,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가 체결한 협약임
  - 인구 200만 명, 경제규모 95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6.6% 차지
- 해오름동맹은 강력한 네트워크 도시로서, 기존 중심도시-위성도시와 같은 종속적,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계와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광역발전 모델임 (최길수 외, 2017)
  - 2017년 7월 27일 해오름동맹 상생협회의의 운영규약 제정·고시
- 동해남부 거점도시라는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토대로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생태계를 조성코자 함

### □ 주요 활동

- 중앙정부 부처별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파악하여, 연계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하고 각 시의 단기 및 중장기 예산에 반영함
  - 3개 분야, 총 22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음 (2019년 5월 기준)

**[표 3-2] 해오름동맹 주요 추진사업 (2019년 5월 기준)**

분야	주요 추진사업
산업·R&D 분야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혁신포럼</li> <li>• 자동차 부품기업 해외 판로 지원</li> <li>• 전기차·전기충전소 공동보급</li> </ul>
문화·교류분야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대축전 개최</li> <li>• 합창페스티벌</li> <li>• 알콩달콩 커플 매칭</li> </ul>
도시인프라분야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방재 및 대응 공동협력단 운영</li> <li>• 산림병해충 공동방재 협의체 구성</li> <li>• SOC분야 국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농소~경주 외동간 국도개설사업</li> <li>-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li> </ul> </li> <li>•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울산~경주 시내버스)</li> </ul>

### 3. 국내 사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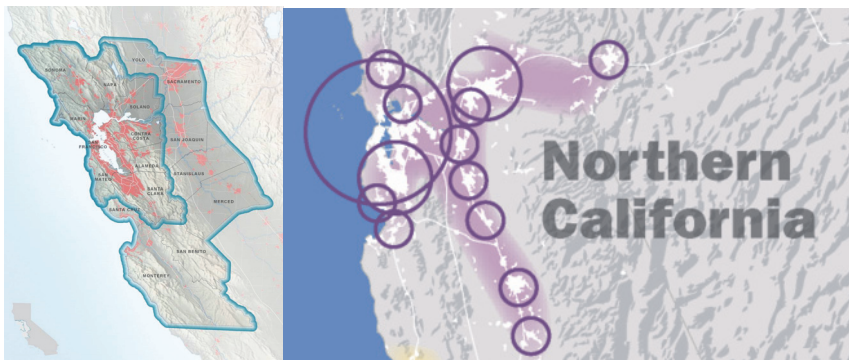
- 국내의 지역상생 사례는 대부분 행정협의회 형태로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 규약을 통해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미약함
- 이들 행정협의회의 역할은 도시적 관점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적인 보완보다는 공동의 협력정책 및 사업을 제안·추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 최근 구성된 ‘행복도시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영남권에 광역지자체 중심의 협약, 협력사업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아직 초기단계로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제2절 해외 사례

### 1.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

#### □ 지역 개요

- 미국의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Northern California Mega region)'은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새너제이, 오클랜드를 아우르는 거대 허브권역으로, 도시화된 캘리포니아 지역임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San Francisco Bay Area), 새크라멘토 지역(Sacramento Area), 북부 산 호아킨 밸리(Northern San Joaquin Valley), 몬테레이 베이 지역(Monterey Bay Area) 등 4개 대도시 소구역으로 구성됨
  - 인구 규모: 약 1,220만 명(2015년)으로 캘리포니아의 31.5%를 차지함
- 텍사스 삼각주(Texas Triangle)와 걸프 연안(Gulf Coast) 지역과 함께 미국 내 경제성장이 높은 3대 메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0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왔고, 2014년 GRDP는 \$8,750억을 달성함(미국 GDP의 5%에 해당)



자료: America2050 (<http://www.america2050.org>)

[그림 3-5]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

## □ 지역 특징

-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은 1990년대 이후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관련 종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07년 이후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약 10만 8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 지역 정책

- 지역간 연계 교류 확대: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 내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 대하여 철도와 수도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본·상품의 이동 등 연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지역 간 통근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유발하여 노동시장의 지리적 확대를 가져 왔고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기회요인이 됨
- 지역별 기능, 산업 특화: 지역별로 다른 기능과 산업으로 특화시키고 지역별 핵심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 역할을 수행함
  - Bay Area : 기술기반, 서비스 중심의 전문 직종 관련 산업
  - Sacramento Area : 정부업무 및 교육 관련 기능
  - Northern San Joaquin Valley : 무역, 운송, 배송 관련 기능
  - Monterey Bay Area : 농업 관련 기능
- 첨단기술 기반 성장: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연관효과를 크게 향상시켜 경제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함
  - 1990~2014년 사이 첨단기술 관련 노동시장 규모가 Northern San Joaquin Valley는 56.1%, Monterey Bay Area는 29.3% 상승하였고, 이는 메가 지역 전체의 동반성장을 야기함
- 혁신주체 구축: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구성하고 각각의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시스템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
  - 각 지역별로 입지한 대학,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메가 리전이 역동적 혁신시스템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함(2014년 메가 리전 소재 8개 대학이 R&D 분야에 \$37억 투자)

[표 3-3]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리전 내 대학 및 연구기관

구 분	대학 및 연구기관
Bay Area	• Stanford University, UC Berkely, UC San Francisco
Sacramento Area	• UC Davis, Sacramento State
Northern San Joaquin	• UC Merced, University of the Pacific
연구기관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자료: 황혜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2018

- 지자체별 협력적 관계 구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별도의 광역 정부나 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해당 지방정부들 간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분야별 추진사업 등을 통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
  - The Sacramento Area Water Forum: 이해 당사자 간 협력적 담론 형성을 위해 운영
  - Collaborative Regional Initiatives(CRIs): 전 지역 시민대표들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발적 거버넌스로 작동
  - Silicon Valley Joint Venture: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기업 리더들에 의해 결성되어 인프라, 교육, 기업지원 등의 이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펀딩을 통해 협력사업 진행

## 2. 영국: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

### □ 지역 개요

- 맨체스터(Manchester)를 포함한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도시권 (Greater Manchester)으로, 2개 도시, 8개 지역으로 구성됨(2014년 1월 결성)
  - 면적은 1,276km<sup>2</sup>,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280만 명 규모로, 노스웨스트 광역권의 약 40%에 해당함



자료: Manchester City of Trees(<https://www.cityoftrees.org.uk>)

[그림 3-6] 영국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

### □ 조직 배경 및 구성

-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 내 10개 지자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 중심의 재생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자체 협의회(AGMA, Association of Great Manchester Association)를 결성하여 공통 문제에 대처해 오
  - 10개 지자체 공동 소유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맨체스터 공항 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함
- 이후 10개 지자체는 광역 맨체스터 교통기금(GMTF, The Greater Manchester Transport Fund)을 조성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공동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맨체스터 광역도시권(GMCA, Great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을 결성함 (2004년 1월)

- 도시권의 대중교통, 경제개발, 기능훈련, 도시재생, 폐기물관리, 저탄소, 계획허가 등을 수행 (이원섭, 2013년)
- 광역 맨체스터 교통서비스위원회(Transport for Greater Manchester Committee), 비즈니스 리더 회의소(Business Leaders Council), 로컬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광역 맨체스터 로컬 교통기구(Local Transport Body for Greater Manchester) 등 운영

## □ 지역 정책

- 재정자율성과 법적 지위 부여: 2009년 법정 도시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런던에 준하는 재정 자율성과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도시권 내 지자체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장기발전전략 제시: 맨체스터 광역도시권(GMCA)는 장기발전전략을 3회 (2009년, 2013년, 2018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권 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성함
  - 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도시권 공동 목표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함
  - 주요 내용: 탄력적 저탄소 성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교통·통신망 확대, 지역-국가-글로벌 연결성 강화, 연구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 핵심 민간·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글로벌 브랜드 구축, 차별화된 통합적 기업 지원,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저탄소도시지역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개선 등
- 연계 교통망 중시: 광역도시권에서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중요하게 인식함
  - 특정 계획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더라도, 지역간 효율적 연계교통망이 구축된다면 개발이익을 주변 지역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함

### 3.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도시계획

#### □ 지역 개요

-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여 있고, 베를린 자체도 연방주임
  - 범위: 총 12개의 행정구(Bezirk)와 94개의 구역(Ortsteil)으로 구성
  - 인구: 약 357만 5천명(2019년)



자료: staedtekrantz (<http://staedtekrantz.de>)

[그림 3-7]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도시계획

#### □ 계획 배경 및 구성

-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동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동계획국이 조직됨
  - 공동계획국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가 공동으로 계약하여 수립(1995년 4월)되었고 1996년부터 공동업무를 수행함
- 공동계획국은 공동 개발프로그램 및 개발계획 등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시는 각각의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 광역도시계획은 처음으로 2008년 법을 통과하여 2009년부터 실행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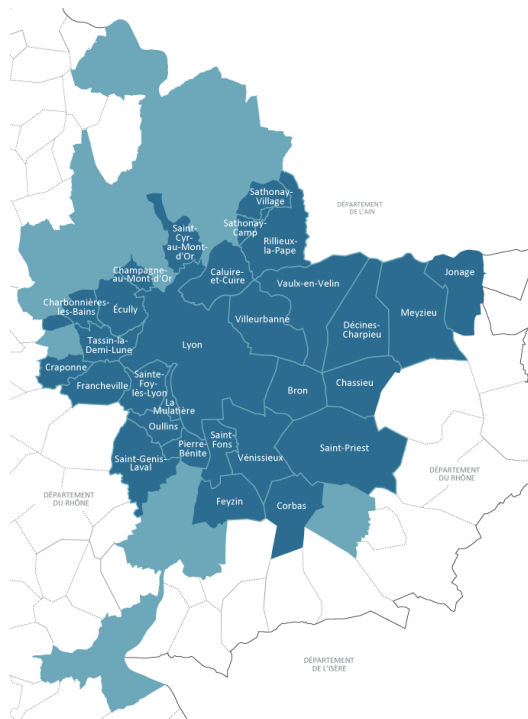
#### □ 계획의 주요 내용

- 수도권: 공간 정비 측면에서 동유럽과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적 연결을 구상함
- 경제, 산업시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권역 내 대상지를 파악하고, 기존 주거지와 연결을 중요시함
  - 대규모 유통시설 개발은 도심의 소규모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영향권을 침해하지 않은 부지를 고려함
- 공급 및 기능 중심지: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광역시설 및 기능 중심지 배치를 위해 광역권, 상위단계 중심지, 중간단계 중심지의 3단계로 구성함
- 주거지 개발: 베를린과 그 주변 브란덴부르크 지자체들이 광역권 중심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여분의 공간에 주거지를 개발하는 경우, 각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장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지역계획 상 기본기능 추가 결정이 가능함
- 오픈스페이스 개발: 오픈스페이스 보호는 모든 계획 및 대책에서 고려되어야 함
  - 오픈스페이스는 시스템화를 통해 기능적·공간적 가치로 연계하고 과도한 사용 및 손상은 지양토록 함
- 교통 및 인프라: 수도권과 각 중심지 연결을 위해 교통 노선 및 광역권의 교통 연결을 위한 기본 노선을 확정해야 함
- 기후 및 홍수와 에너지: 기후대책은 주거지 및 교통용도 개발시 우선적으로 고려함

## 4. 프랑스: 리옹 메트로폴

### □ 지역 개요

- 리옹 메트로폴(Lyon Metropole)<sup>3)</sup>은 리옹시를 포함한 59개의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음
  - 면적: 533.68km<sup>2</sup>
  - 인구: 약 138만 1,400명(2016년)
  - 국내총생산(GDP): 2018년 약 740억 유로로 파리 다음의 경제 규모



자료: Maintenir(<http://www.maintenir.asso.fr>)

[그림 3-8] 프랑스 리옹 메트로폴

3) 다수의 코뮌으로 구성된 코뮌협의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균형 발전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지역간 연대 조직이자 도시기능 중심의 대도시권 (『프랑스 국토 개혁정책의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5)

## □ 성장과정 및 추진정책

- 리옹은 19~20세기 산업화과정에서 프랑스의 중앙집권화가 심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걸음
  - 1970년대 탈중앙화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였으나 파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집중화 정책과 국내 도시간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음
- 전통적 산업구조를 가진 리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 양질의 공공공간 조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유산의 미관 개선 및 공공공간 조성작업을 진행
  - 주거지 조성: 중·상류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지 조성
  - 재생 및 문화활성화: 시내에 산재해 있는 로마,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 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원도심 재생과 문화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 도시 마케팅: '온리 리옹(ONLY-LYON)' 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실시(프랑스 최초의 도시홍보정책)
  - 유럽도시 연합체 결성: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로시테(EuroCity)라는 유럽도시 연합체를 결성하여 유럽내 도시간 이동이 활발해짐
- 지방자치단체 개혁법에 의거하여 2015년에 10개의 메트로폴이 설립되었고, 이때 리옹도 메트로폴의 자격을 부여받음
- 리옹 메트로폴은 도심환경 개선, 주거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 5.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 □ 지역 개요

- 북홀란드(North Holland), 남홀란드(South Holland), 유트레히트(Utrecht), 플레볼란트(Flevoland)의 4개의 카운티로 구성, 주요 도시로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이 있음
  - 면적: 8,287km<sup>2</sup> (도심지역 면적 4,300km<sup>2</sup>)
  - 인구: 약 811만 명(2018년)으로 네덜란드 인구의 약 47%가 거주
- 지역총생산 367조 유로로 유럽에서 4번째 규모임



자료: 충남발전연구원(2008), [해외탐방]서유럽 네트워크 도시, 란트스타트

[그림 3-9]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 □ 지역 특징

- 란트스타트는 단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위계형 대도시권이 아니라 50~60km<sup>2</sup>권 내에 유사한 규모의 4개 주요 도시와 13개 주변도시로 구성된 네트워크 도시임(최길수 외, 2017)
- 13개 도시들은 각각 산업부문이 전문화되어 있고 각 도시의 전문화를 기초로 상호밀접한 관계를 통해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주요 산업은 원예산업, 화훼산업, 수송과 물류시스템, 건축디자인, 석유

화학, 유통, 마케팅 및 광고, 정보통신, 미디어, 철강, 무역, 식품, 관광, 회계, 수자원 공학 등이며, 각 도시들이 기능을 분담하고 공간적 시스템으로 연결됨(권영섭 외, 2008)

[표 3-4] 란트스타트 주요 도시의 기능

구분	주요 산업 및 기능
암스테르담	• 기업본사, 금융, 관광, 무역, 예술, 레저, 항만, 과학기술
헤이그	• 다수의 국제기구 밀집, 대학도시 라이든(Leiden) 위치 • 행정·정치 중심지, 기업본사, 관광, 컨설팅
로테르담	• 세계적인 해운물류의 요충지·관문 • 항만, 국제무역, 공항, 기업본사
유티레히트	• 네덜란드의 중심부, 암스테르담(스키폴공항)과 근접 • 도로·철도의 허브, 무역, 컨설팅

자료: 황혜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 란트스타트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서비스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각 도시별 산업·경제적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상호 보완으로 광역도시권으로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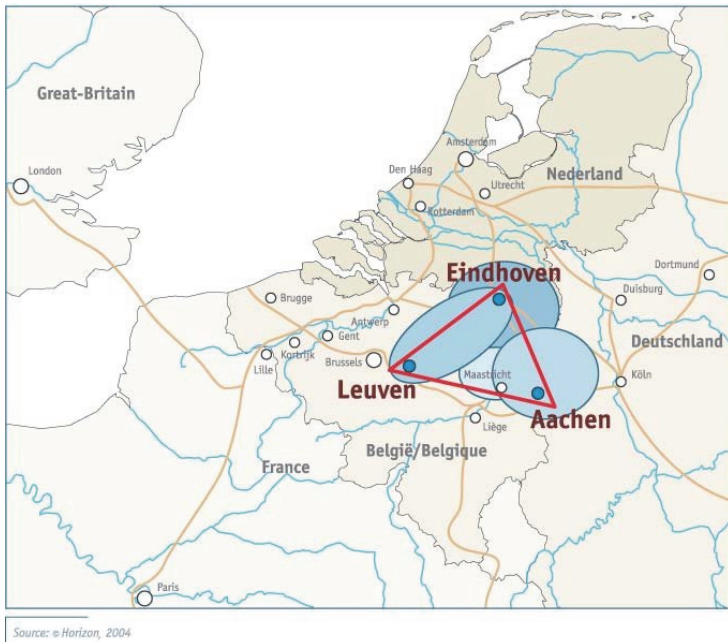
#### □ 지역 정책

- 광역 거버넌스 구축: 란트스타트는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인 지방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의회는 각 지방정부와 다른 기관들의 수평적인 상호협력에 의해 운영됨
- 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인근 지역 경제주체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식하며 란트스타트 내에서 서로 다른 도시 소재의 기업간 협력적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됨
- 인프라 구축: 해외국가와의 교류를 위한 항구 및 스키폴 공항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를 구축함
  - 지역 내 도시간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과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도시 간 접근성이 높아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에서 총 고용규모나 고용밀도가 높게 나타남

## 6.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도시권

### □ 지역 개요

- 아인트호벤 도시권은 네덜란드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아인트호벤과 헬몬드를 중심으로 21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됨
- 암스테르담 공항, 로테르담 항구 등 주요 교통인프라 시설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함



자료: ResearchGate(<https://www.researchgate.net>)

[그림 3-10]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도시권

### □ 지역 특징

- 아인트호벤 도시권은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GRDP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민간 R&D 예산의 45%를 동 지역에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한 지역임
  - 첨단산업 종사 근로자 비중이 약 20%로 네덜란드 내에서도 최상위권



지역

- 아인트호벤은 필립스를 중심으로 NXP 반도체, ASML 반도체, Matlab 소프트웨어, Technical University of Eindhoven 등 주요 혁신주체들이 입지한 대표적인 혁신집약 대도시권임

#### □ 지역 정책

- 연계 프로그램 시행: 아인트호벤 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으로는 Horizon Programme, Brainport Programme, ELAt(Eindhoven Leuven Aachen triangle) 등 3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 Horizon Programme: 2001년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트호벤 중심의 네덜란드 남동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지역 경제구조를 산업밀집지역에서 첨단기술집약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rainport Programme: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와 지역 연구기관 및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그램. 아인트호벤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유럽이나 세계 타 도시 및 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을 통한 상호보완을 추구
  - ELAt(Eindhoven Leuven Aachen triangle): 아인트호벤, 뢰벤, 아헨 세 도시간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산·학·연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식집약경제 발전을 추구함을 목표로 함

## 7.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 □ 지역 개요

- 이탈리아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파르마(Parma), 볼로냐(Bologna), 모데나(Modena) 등 9개의 현으로 구성됨
  - 면적: 22,124km<sup>2</sup>,
- 1인당 국민소득이 이탈리아 내에서 4번째로 높은 지역이고 EU 내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임
- 낮은 실업률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균형적 비율, 높은 창업비율을 보이고, 근로자당 수출비율이 이탈리아 내에서 가장 높음



자료: Maps Of the World

[그림 3-11]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 □ 지역 특징

- 전문화된 생산시스템: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연화·전문화<sup>4)</sup>된 생산시스템을 구축함한 대표적인 모델. 즉, 산업발전이 지역사회 생활, 가치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임
- 기업 전문성 강화: 기업들은 일부 생산단계나 업종에만 집중함으로써

4) 마이클 피오르와 찰스 사벨에 의해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에밀리아 로마냐에 '유연 전문화'의 개념 도입 (정태인, 2013)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함

- 각 현별 특화 산업지구 내에는 제조 기업 뿐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별 시장조사, 기술훈련 등과 같은 소규모 단위의 사업서비스 또는 금융서비스 전문기업 등이 발달

## □ 지역 정책

- 기업 교류 중시: 기업의 특수화 및 전문화를 위해 기업간 정보교환 및 교류를 강조함
  - 생산과정에서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 시도
  - 글로벌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유 자산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Emilia-Romagna CAN 등의 협회, 조직을 운영
- 주체간 협업 강조: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농수산, 건설, 환경, 에너지, ICT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혁신주체 간 협업을 중시함
- 여러 기관 중에서 특히, 지역개발공사인 ERVET는 권역내 혁신 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 지역 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조정, 해외투자 유치, 민관 파트너십 지원, 기술 지원 등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산업, 혁신, 경제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조정 역할
- 에밀리아 로마냐는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지방법률을 마련한 초기 지역 중 하나로 국토관리계획을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의 수단으로 적용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큼

## 8. 해외 사례 시사점

- 지역상생의 해외 사례는 국내 사례 대비 지역간 협력의 동기와 형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 리전: 첨단기술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간 다양한 연계와 교류 촉진
  - 광역 맨체스터: 기능적으로 관련된 지역들 간 장기발전 전략 제시와 도시권 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여 추진
  - 란트스타트: 공간적으로 연계된 각 도시간 산업부문 분업과 전문화를 기초로 다핵형 광역네트워크 형성
  - 로마냐: 중소기업 간 각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전문화된 생산시스템 구축
- 국가별·지역별 공간적 특징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적극적인 도시간 협력을 실행하고 있음
  - 광역 맨체스터: 법적 구속력 지닌 맨체스터 광역도시권 결성으로 도시권내 지자체 협력과 공동발전 추진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계약을 통해 공동계획국을 조직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계획 수립 및 실행
  - 란트스타트: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인 지방의회와 집행위원회 구성, 또한 공식적인 행정구조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거버넌스도 설립·운영

## 상생협력 과제 도출

제1절 과제 도출 과정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제3절 최종 과제 도출

#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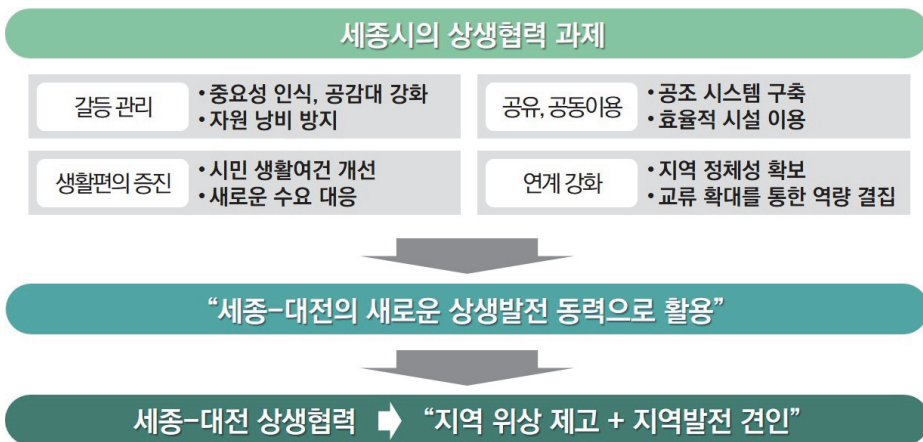


# 제4장 상생협력 과제 도출

## 제1절 과제 도출 과정

### 1. 과제 선정의 원칙·기준

- 본 연구에서는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다음의 6가지 ‘과제 선정의 원칙·기준’을 설정하였음
  - 기존 사업 참조: 기존 상생협약, 관련 연구자료, 세종시 검토자료 등에서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파급 효과: 사업의 혜택이 두 도시에 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사업
  - 실현성: 사업 추진이 용이하여 실현성이 높은 사업
  - 시급성: 시민 관심이 높거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
  - 대표성: 해당 영역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사안으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시민 중심: 시민 만족을 우선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그림 4-1] 세종시 상생협력 과제 도출 방향

## 2. 상생 이슈 찾기

- 세종시는 건설 이후 인구 등 전 부문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온 관계로 충청권 지역, 도시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음
- 상생협력 작업은 발생가능한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세종시 건설 효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2] 타 지역(도시)과의 상생 관심사안

- 워드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근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도출한 세종-대전간 주요 이슈는 [그림 4-3]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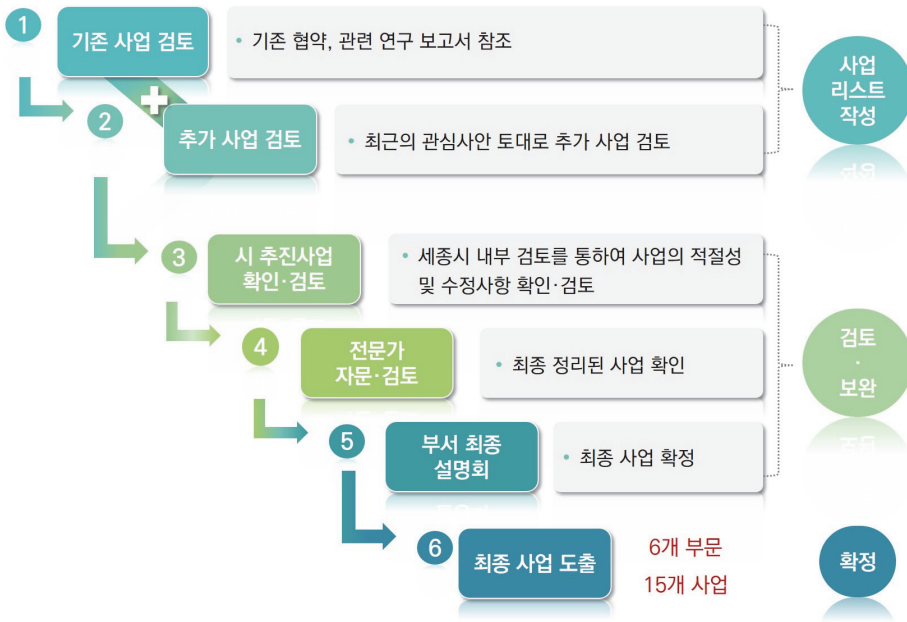


[그림 4-3] 과제 도출을 위한 Issue Finding



### 3. 단계별 과정

- 본 연구에서는 상생협력 과제 도출을 위한 단계별 검토과정을 진행함
- 전체적인 검토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4-4]와 같음
  - 앞서 언급한 원칙 기준을 토대로, ① 기존 사업 검토, ② 추가 사업 검토, ③ 시 추진사업 확인·검토, ④ 전문가 자문·검토, ⑤ 부서 최종설명회, ⑥ 최종 사업 도출 등의 세부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4-4] 과제 도출 과정

① 기존 사업 검토

- 기존 협약에서 제시된 사업, 관련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1차 상생협력 사업 리스트를 작성함

② 추가 사업 검토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최근의 관심영역을 다룰 수 있는 과제를 추가, 정리함

③ 시 추진사업 확인·검토

- ‘① + ②’ 과정을 거쳐 사업리스트를 취합·정리하고, 세종시 내 각 과제 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보완함

④ 전문가 자문·검토

- 과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과제 도출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의견을 청취함

⑤ 부서 최종설명회

- 세종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수정하여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함

⑥ 최종 사업 도출

- 세종시 사업별 담당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약을 위한 세종시 입장에서의 최종 ‘세종-대전 상생협력 사업’을 도출함

## 제2절 단계별 검토 사항

### 1. 기존 사업 검토

#### □ 사업 영역 구분

- 기존 협약에서는 사업영역을 5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6개 분야로 재정리함
  - 기존 협약에서의 영역 구분(5개 분야): 산업·경제, 교통, 도시·시설, 문화·관광, 행정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역 구분(6개 분야): 교육, 도시·시설·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행정·복지, 환경

#### □ 검토 1: 사업 목록 검토(사업리스트 39개 사업 정리)

- 기존(2015년)에 진행되었던 ‘세종-대전 상생협력사업’과 LH 토지주택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의 연구자료, 그리고 세종시 내부자료 등을 검토하여 전체 사업리스트를 작성함
  - 기존 보고서 등의 제안 사업(97개) 중 유사하거나 중첩된 내용, 실행 불가능한 사항, 이미 수행된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필터링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사업 목록을 검토함
  - 유사하거나 중복적 성격의 일부 사업명은 간단한 형태로 통일하여 표기함
  - 검토한 참고자료 리스트: 기존 협약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2015),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자료,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2014)<sup>5)</sup>,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2017)<sup>6)</sup>·(2018)<sup>7)</sup>, 대전세종연구원 발표자료<sup>8)</sup> 등임

5) LH 토지주택연구원(2014),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6) 최길수 외(2017),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7) 황혜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8) 강영주(2017), 대전세종 상생협력 전략과제, 「대전세종 상생포럼」.

□ 검토 2: 1차 사업 목록 정리(39개 사업 → 27개 사업)

- 사업 목록 검토과정에서 정리된 39개 사업 중 연구진 논의과정을 거쳐 ‘연장 및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여 27개 사업을 ‘1차 사업’ 목록으로 정리함
  - 사업의 규모, 목표연도는 기존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일부사업은 성격과 범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2. 추가 사업 검토

- 검토된 1차 사업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양 도시 간에 관심이 높거나(미세먼지),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역(생활문화)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검토함
- 추가 사업 검토 영역: 미세먼지대책 상생협력·전략,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 추가 사업 세부내용

- 추가 1: 민간중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구분	내 용
사업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및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사업목표	• 세종·대전의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에 대한 공동의 상시적 감시·감독 체계 구축 • 상시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사업내용	•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 민·관 공동의 환경오염 감시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

○ 추가 2: 대전-세종 생활문화 관련 행사 공동 개최

구분	내 용
사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은 예술의전당·월드컵경기장·한밭야구장 등을 통해 충청권 문화예술 중심지로 기능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는 아직 대전보다 미약한 부분이 많음</li> </ul>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권 생활문화 축전 형식과는 별개로 세종-대전의 생활문화 관련 행사를 공동개최하여 세종-대전의 교류와 연계, 협력을 더욱 용이하게 함</li> <li>세종-대전의 상호 보완적 관계 및 문화정체성 형성</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대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활문화행사 공동 개최</li> <li>두 지역의 예술가들의 교류 및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li> <li>- 예: 금강을 소재로 한 그림·사진·영상·연극 등 행사 개최</li> </ul>

○ 추가 3: 생활문화 시설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구분	내 용
사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과 대전의 문화기반시설은 아직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li> <li>대전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등과 같은 대규모 공연시설은 아직 세종에 없으며, 소규모 공연장도 부족한 실정임</li> <li>세종 시민에게도 대전 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문화 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li> </ul>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접도시간 문화적 혜택 및 공간 공유를 통해 세종-대전의 교류 확대</li> <li>지역민들의 정체성 확인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민들에 일정한 요율의 할인 적용</li> <li>문화기반 시설 이용에 있어 할인 등의 우대정책을 세종-대전, 나아가 충청권 시민에게 문화를 개방</li> </ul>

\* '기존 사업 검토(27개 사업) + 추가 사업 검토(3개 사업)'

→ 기존 사업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30개 사업을 추출하여 조정작업 (세종시 관계자,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을 진행

### 3. 세종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 시 추진사업 확인·검토

- 앞서 정리한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종시 담당부서별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정리함
- 현재 시점에서의 여건 변화, 사업 추진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 정리함

#### □ 전문가 자문·검토

- 관련 전문가 및 세종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내용을 보완·정리함
  - 전문가 자문회의: 2020년 1월 21일 개최

#### □ 부서 담당자 대상의 최종설명회 개최

- 앞서 진행한 세종시 관련부서 의견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사업 목록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대상으로 세종시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설명함
- 관련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최종 과제를 도출함

\* 30개 사업 → 세종-대전 상생협력을 위한 “최종 15개 사업” 도출

# 제3절 최종 과제 도출

## 1. 사업 도출 결과

- 단계별 검토과정을 거쳐 세종시의 ‘세종-대전 상생협력사업’으로 도출한 과제는 [표 4-1]과 같음
- 상생협력사업 과제는 ‘총 6개 영역, 15개 사업’으로 구성됨

[표 4-1] 최종 상생협력사업 도출 결과(15개 사업)

분야	구분	과 제 명	담당부서
교육 (A-1개)	A-1	평생학습 교·강사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도시·시설 ·교통 (B-4개)	B-1	세종~대전 철도교통망 구축	교통과
	B-2	세종~대전 연결 대안도로 개발	도로과
	B-3	세종~대전 간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건설	교통과
	B-4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과
문화·관광 (C-6개)	C-1	세종·대전 문화의 통합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과
	C-2	자전거 둘레길 유지관리	치수방재과
	C-3	대전-세종 관광 실크로드	관광문화재과
	C-4	세종-대전 생활문화 관련 행사 공동 개최	문화예술과
	C-5	공공적 문화 향유시설의 개방	문화예술과
	C-6	거장의 동행: 이응노-장욱진	문화예술과
산업·경제 (D-1개)	D-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 강화	경제정책과
행정·복지 (E-1개)	E-1	중증장애인 리프트 전용버스 사업	노인장애인과
환경 (F-2개)	F-1	자원재활용 시민문화 확산	자원순환과
	F-2	민간중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환경정책과

## 2. 사업별 주요 내용

- 최종적으로 도출된 15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 정리한 사업별 개략적 내용은 대전시와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A-1: 평생학습 교·강사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교·강사 인력 POOL의 공동활용으로 전문인력 편중문제를 해소하고 전문분야별 연중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운영</li> <li>-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 및 국립특수교육원(아산)을 중심으로 교육연수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근거리 교육연수로 지역 강사 육성 활성화 및 참석률 제고</li> </ul>

### □ B-1: 세종~대전 철도교통망 구축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간 유동인구 증가에 비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은 광역버스(BRT 등)가 유일함</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세종 광역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세종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방안 구체화</li> </ul> </li> <li>• 일반철도 세종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선에서 세종청사까지 일반철도를 인입하고 청사 중심부에 ITX 세종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li> </ul> </li> </ul>



□ B-2: 세종~대전 연결 대안도로 개발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도시~대전시 간 연결도로의 목표 교통량이 이미 초과한 실정임</li> <li>• 특히 구즉·세종로는 교통혼잡 시 우회할 수 있는 대안도로 건설 시급</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도로건설을 통한 교통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의 출·퇴근시 교통 불편이 극심함. 신규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분산 대안으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li> <li>- 이를 통해 내부 교통량 분산 및 주변지역 접근성 향상, 세종테크노밸리~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특구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li> </ul> </li> </ul>

□ B-3: 세종~대전 간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건설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도시 승용차의 도시진입 감소 및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 경계지점의 주차장 건설이 필요함</li> <li>• 도심 내 승용차 분담률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경계지점 주차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2생은 완료, 1생은 공사 착공(2019.12), 3생은 설계중(2019.03)</li> </ul> </li> <li>• 환승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이동수단(PM, 자전거 등)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구상</li> </ul> </li> </ul>

□ B-4: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 낮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li> <li>• 세종~대전간 광역버스 노선 확대·증편 요구 증가</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간 광역버스 기존노선 운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기존 버스노선의 운영시간 확대 등</li> </ul> </li> <li>• 광역노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안)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조하여 신규 광역급행버스 검토</li> </ul> </li> </ul>

□ C-1: 세종·대전 문화의 통합 홍보 마케팅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홍보방식(지자체 홈페이지)의 한계점 극복</li> <li>• 기존 협약에서 추진한 해외 마케팅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으로의 통합적 홍보전략 필요</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IMC)을 반영한 다각적 홍보 추진</li> <li>• ICT 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 채널 구축, 홍보전략 모색 등 검토</li> </ul> </li> <li>• 세종·대전지역의 문화산업 주요 생산자(전문 문화예술인 등)와 시민 간의 멘토링사업으로 문화 수용자의 향유 수준 확대</li> <li>• 양 도시의 지역문화를 알리는 공동 기획사업 조성</li> </ul>

□ C-2: 자전거 둘레길 유지관리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하천 둘레길의 이용률</li> <li>• 수변공간은 휴식공간 및 생태 관련 교육 장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 여가문화 공간으로까지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임</li> <li>• 갑천·금강을 연결하고 있는 자전거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협력 필요</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천·금강으로 연결된 하천생태 자전거길은 행정구역상 세종시-청주시-대전시가 연계되어 있으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길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시설 보수, 파손부분 신속복구와 정기적인 예초 및 유해수목 제거 등의 자전거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상생협력 필요</li> <li>• 상생협력 방안: 분기별 1회 갑천·금강 자전거길 합동점검 실시 및 보수대책 강구</li> </ul>

□ C-3: 세종-대전 관광 실크로드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은 타 광역도시권 대비 문화관광자원이 취약</li> <li>•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과 과학도시 대전이 지닌 특성을 융화하여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과 대전이 각각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융화한 신규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세종의 교과서 박물관, 대통령 기록관+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자연생태 학습원, 탐이동물원) 등을 엮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일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한밭수목원(시립미술관, 이응노 미술관) 등 힐링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li> <li>•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충청권 행복여행' 상품을 보완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학생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양 지자체 시티투어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li> </ul> </li> </ul>

□ C-4: 세종-대전 생활문화 관련행사 공동 개최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은 예술의 전당, 월드컵경기장, 한밭야구장 등을 통해 충청권 문화예술 중심지로 기능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는 아직 대전보다 미약한 부분이 많음</li> <li>•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 생활문화 축전 형식과는 별개로 ‘세종-대전 생활문화 관련행사 공동 개최’를 통해 세종-대전의 교류와 연계, 협력을 더욱 용이하게 함</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활문화 행사 공동 개최</li> <li>• 두 지역의 예술가들의 교류 및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문화예술 관련 미약한 부분을 대전과 공동 행사 개최를 통해 채울 수 있음</li> </ul> </li> <li>• 금강을 소재로 한 그림·사진·영상·연극 등의 생활문화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활성화</li> <li>- 향후 예산 확보 이후 재검토 필요</li> </ul> </li> </ul>

□ C-5: 공공적 문화 향유시설의 개방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에 비해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의 문화 향유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세종·대전 간 문화향유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토록 함</li> <li>• 세종시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충족 및 대전권 문화 창작자들에게 고정적 문화 수용자 유치를 도모함</li> <li>• 인접도시끼리 문화적 혜택 및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대전과 세종의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 시설이용에 있어 할인 등의 우대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정체성 확인</li> <li>• 세종시민에게 대전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증대 효과 기대</li> </ul>

□ C-6: 거장의 동행: 이응노-장욱진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대표 이응노 화백과 세종 대표 장욱진 화백의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재조명과 가치 콘텐츠화 필요</li> <li>• 지역문화예술인에 자긍심 부여 및 도시 문화정체성 고양의 계기 마련</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을 대표하는 이응노 화백과 세종을 대표하는 장욱진 화백의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재조명과 두 화백이 현대미술사에 남긴 가치를 콘텐츠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거장의 독특한 화풍과 작품세계를 함께 탐구하고 스토리텔링화하여, 세종-대전의 지역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도시 문화정체성을 고양하는 계기 마련</li> </ul> </li> <li>• 두 화백을 함께 탐구하는 학술행사 및 연구 공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기념관 건립 추진(2020~2023) 및 ‘장욱진 그림마을’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사업 완료 후 이응노미술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함</li> </ul> </li> </ul>

□ D-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 강화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연구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동·둔곡·도룡지구)와 기능지구(세종시 외)로 구분됨</li> <li>• 세종·대전 내 연구기관 간의 공동 R&amp;D를 지원하고 과학벨트 연계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전-세종(기능지구) 간의 공감대 형성</li> <li>•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거점-기능지구 R&amp;D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대전-세종 공동 건의 추진</li> </ul> </li> <li>•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및 연계협의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지구는 BCC 중심, 거점지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IBS가 참여하여 거점-기능지구 연계협의체 구축 필요</li> <li>- 출연(연)과 SB플라자간 교류사업 발굴·추진</li> </ul> </li> <li>•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대덕특구 확대와 함께 대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 필요</li> </ul>

□ E-1: 중증장애인 리프트 전용버스 사업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 각각 장애인콜택시사업 및 리프트 차량운행(승합차량)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단체로 이동시 분산 운행해야 하는 불편 발생</li> <li>• 장애인 단체 이동(행사참여, 여행 등) 지원을 위한 리프트 전용버스를 양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운영 효율성 증진 도모</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버스 구입 및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및 세부운영계획 협의</li> </ul> </li> <li>•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관리 및 사업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 등(센터 홈페이지 활용)</li> </ul> </li> </ul>

□ F-1: 자원재활용 시민문화 확산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전은 대도시권으로 단일한 소비생활권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과 사업은 미미함</li> <li>• 세종·대전의 행정단위를 넘어서 시민사회 연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문화 확산 필요</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시민문화 확산 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에 '제1회 세종시 자원순환축제'를 민관이 함께 추진한 것처럼 축제 추진 시 대전과 협력을 통해 일부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방안 협의</li> <li>- 재활용 패션쇼, 이동환경교실, 도전골든벨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li> </ul> </li> <li>• 세종·대전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까지 재활용품 교환·판매, 교육·홍보, 가공, 체험 기능 등을 수행할 재활용·업사이클 설치 추진 중에 있음</li> <li>- 세부 운영사업 검토 시 대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li> </ul> </li> </ul>

□ F-2: 민간중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구분	내용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 및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li> <li>- 대전·세종의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에 대한 공동의 상시적 감시·감독 체계 구축</li> <li>•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li> </ul>
협력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li> <li>- 세종시는 국고보조사업(환경부)으로 2019.10.14부터 운영중</li> <li>-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계속 운영계획</li> <li>•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도·홍보 업무 병행</li> </ul>





## 결론

제1절 검토내용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 제5장 결론

## 제1절 검토내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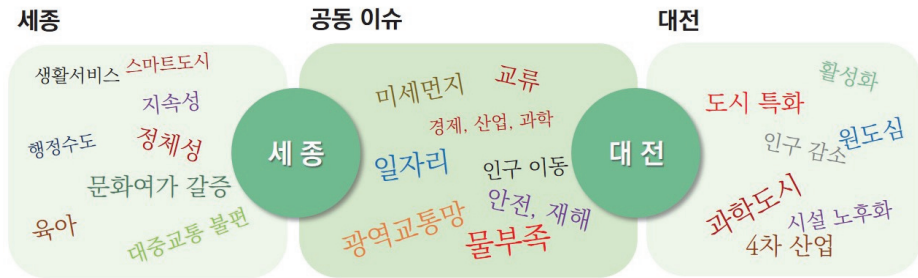
- 세종과 대전은 지난 2015년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발전 내용을 포함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두 도시 간의 상생협력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2015년 협약 체결 이후의 변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력방안을 검토·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세종-대전'간 상생협력 협약에 대비하여 기존 상생협력 협약 사업과 최근까지 진행된 관련연구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생발전 사업을 제시하였음
  
- 연구의 상생협력 과제 도출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과제 선정의 원칙·기준

- 기존 사업 참조: 기존 상생협약, 관련 연구자료, 세종시 검토자료 등에서 제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파급 효과: 사업의 혜택이 두 도시에 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사업
- 실현성: 사업 추진이 용이하여 실현성이 높은 사업
- 시급성: 시민 관심이 높거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
- 대표성: 해당 영역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사안으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시민 중심: 시민 만족을 우선으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이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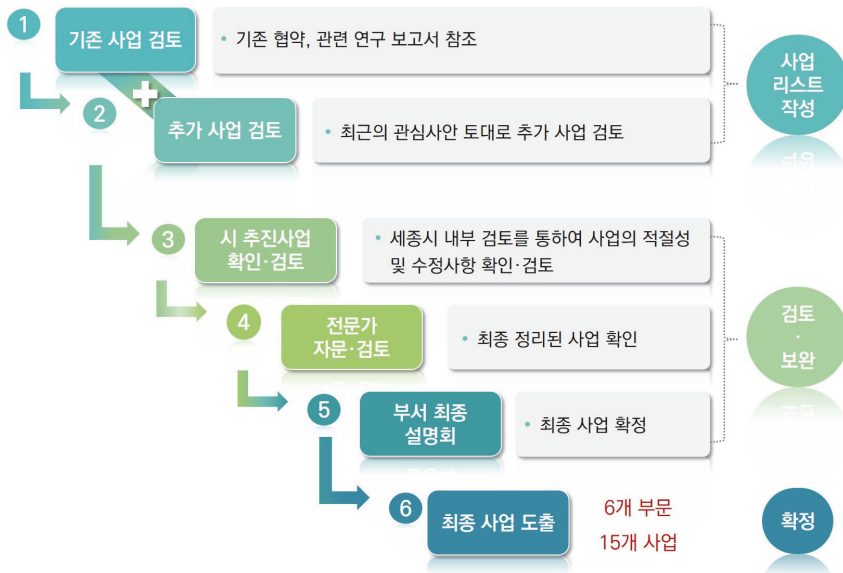
- 워드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출한 세종-대전간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과제 도출을 위한 Issue Finding ]

□ 단계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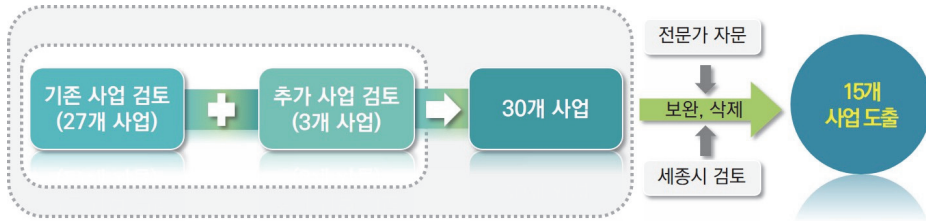
- 상생협력 과제 도출을 위한 과정을 정리하면, ① 기존 사업 검토, ② 추가 사업 검토, ③ 시 추진사업 확인·검토, ④ 전문가 자문·검토, ⑤ 부서 최종설명회, ⑥ 최종 사업 도출 등의 세부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제 도출 과정 ]

□ 사업 도출 결과

- 단계별 검토과정을 거쳐 세종시 입장에서 ‘세종-대전 상생협력사업’으로 도출한 최종 과제는 6개 영역, 총 15개 사업임



[ 최종 상생협력사업 도출 결과(15개 사업) ]

분야	구분	과 제 명	담당부서
교육 (A-1개)	A-1	평생학습 교·강사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B-1	세종~대전 철도교통망 구축	교통과
도시·시설 ·교통 (B-4개)	B-2	세종~대전 연결 대안도로 개발	도로과
	B-3	세종~대전 간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건설	교통과
	B-4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과
문화·관광 (C-6개)	C-1	세종·대전 문화의 통합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과
	C-2	자전거 둘레길 유지관리	치수방재과
	C-3	대전-세종 관광 실크로드	관광문화재과
	C-4	세종-대전 생활문화 관련 행사 공동 개최	문화예술과
	C-5	공공적 문화 향유시설의 개방	문화예술과
	C-6	거장의 동행: 이응노-장욱진	문화예술과
산업·경제 (D-1개)	D-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 강화	경제정책과
행정·복지 (E-1개)	E-1	중증장애인 리프트 전용버스 사업	노인장애인과
환경 (F-2개)	F-1	자원재활용 시민문화 확산	자원순환과
	F-2	민간중심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환경정책과

## 제2절 정책 제언

-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과의 연계 협력은 지역의 우호를 증진하고 세종시 건설 이후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두 도시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광역적 동반발전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의 질을 제고함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 시민 만족 제고에 주력

- 세종-대전은 통근, 통학 등의 이동이 많다는 점에서 단일 생활권이라 볼 수 있음
- 이를 고려한다면, 협력사업은 시민의 도시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

### □ 상생협력사업 지속 발굴

- 세종시와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15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새로운 협약을 준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마련한 협약을 위한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의 여건 변화, 도시 특성 등을 반영하는, 도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세종과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 성장발전을 선도하는 효과 기대


### □ 신중한 사업 선정

- 앞으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지자체 간에 민감한 사안은 적절하지 않음
  - 가급적 두 지자체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용이하고,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함이 바람직함

- 사업 선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통 관심사안 + 사업추진의 혜택 및 효과의 배분 + 적극적 추진 가능성(실현성)”을 중심으로 검토함이 적절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설치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기존시설의 효과적인 광역 이용을 도모하거나, 지역의 교류 확대 또는 연계를 지원하는 영역과 관련된 사업이 상생의 취지에 적절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최근 인접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임
  - 상생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도시·지역간 연계·교류가 강화되고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세종-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협력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①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예: 간사이 광역연합) 또는 ② 개별 사업 단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추진체(협의체 등) 구성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간사이 광역연합(일본):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여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본 최초의 광역 연합)
  - 의회(의결)+ 협의회(집행부)+ 사무국으로 구성





## 참고문헌

- 강영주(2017), '대전세종 상생협력 전략과제', 대전세종 상생포럼 발표자료.  
국토교통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연구원(2019),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광역행정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  
권용석 외(2015), '대구경북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이동우·이미영·서연미·하수정·윤영모(2013), '지역통합·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지역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정경석(2015),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최길수·권대한·김흥태(2017),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2008), '[해외탐방]서유럽 네트워크 도시'.  
황혜란 외(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2014),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 경북매일 홈페이지 (<https://www.kbmaeil.com>)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alance.go.kr>)  
굿뉴스365 홈페이지 ([www.goodnews365.net](http://www.goodnews365.net))  
글로벌이코노믹 홈페이지 (<http://g-enews.com>)  
네이버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뉴스1 홈페이지 (<http://news1.kr>)  
대구광역시 공식블로그  
대구·경북뉴스 ([www.dailydgnews.com](http://www.dailydgnews.com))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대전일보 홈페이지 (<http://www.daejonilbo.com>)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www.seoul.co.kr>)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www.skyedaily.com](http://www.skyedaily.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s://news.joins.com>)  
케이투데이 홈페이지 ([www.ktoday.co.kr](http://www.ktoday.c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Amarica2050 (<http://www.america2050.org>)

Maintenir (<http://www.maintenir.asso.fr>)

Manchester City of Trees (<https://www.cityoftrees.org.uk>)

ResearchGate (<https://www.researchgate.net>)

Staedtekranz (<http://staedtekranz.de>)